

Market Strategy

새 정부 출범과 산업별 영향 점검

리서치센터_swlee659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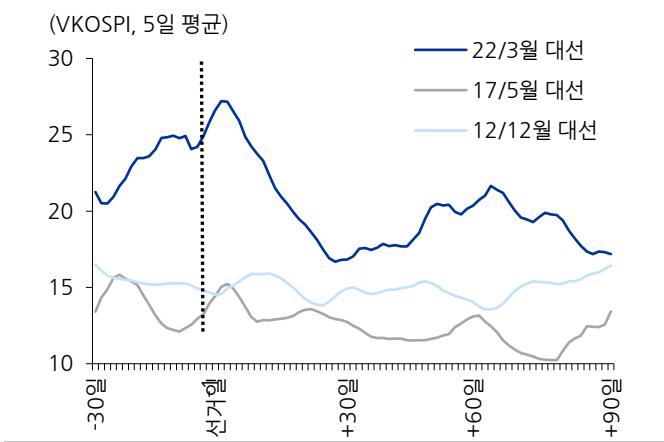
- 대선 결과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
- 하지만 대선 이후 증시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 과거 아홉 번의 대선에서 1년 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세 번뿐
- 이번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부동산에 비해 우호적인 증시 정책과 2차 추경 등 부양 정책.
- 증시 분위기는 우호적일 전망. 이전 정부와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증권,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 유효.

국가 지도자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새로운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대통령 재임기간 경제 성장률이 직전 정부 수준을 넘어선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의 아킬레스 건인 인구구조적 문제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 약세, 국제 지정학적 혼란 등을 거스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지난 아홉 번의 사례를 보면, 대선 한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 14~16% 상승했다. 대선 1개월, 3개월, 12개월 후 KOSPI가 하락한 경우는 세 번뿐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낮아지고, 기대감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21세기 선진국 코리아의 계엄이라는 비현실인 상황이 마침내 제거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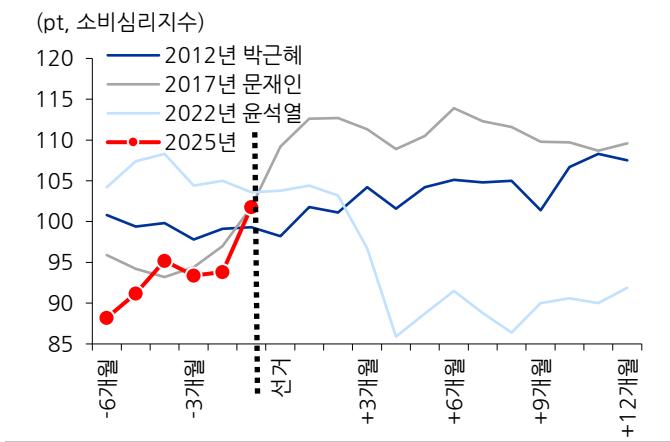
시장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에 우호적 정책이다.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범했던 부동산 규제의 역효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추경 등 민생 살리기와 자본시장과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규제"가 아닌 "규제혁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증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업종과,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대선 이후 대체로 증시 변동성 하락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2017년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국내 소비심리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현실의 현실: 구조적 흐름을 거스르진 못해

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가 되든,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이나, 재임기간의 대형 이벤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성장을 둔화를
막지는 못해

단적인 사례가 성장률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줄곧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기간 경제 성장률이 직전 대통령 당시 평균을 넘어선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국내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막지는 못한 것이다.

재정도
큰 차이는 없어

그래도 차이는 있다. 진보 성향 정부가 재정에 완화적이긴 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당시 재정지출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카드버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코로나 19 위기가 있었다. 보수 성향 정부라고 해서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도 아니었다.

도표 1. 어떤 대통령도, 국내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를 막지는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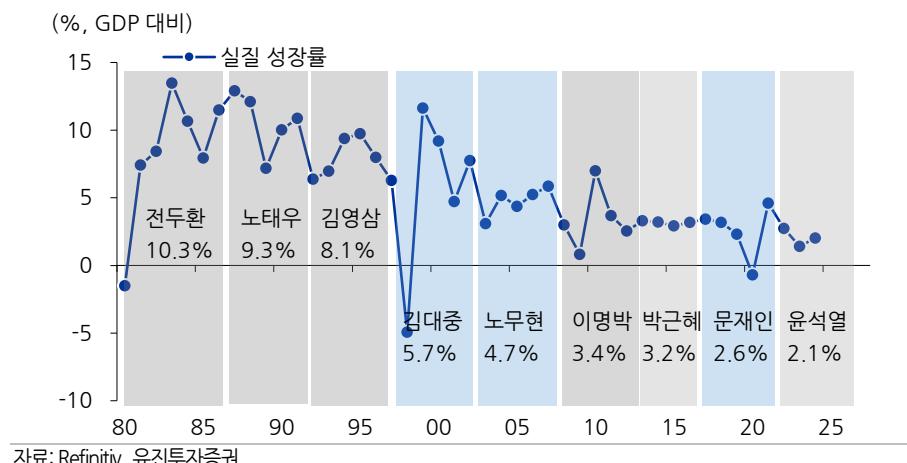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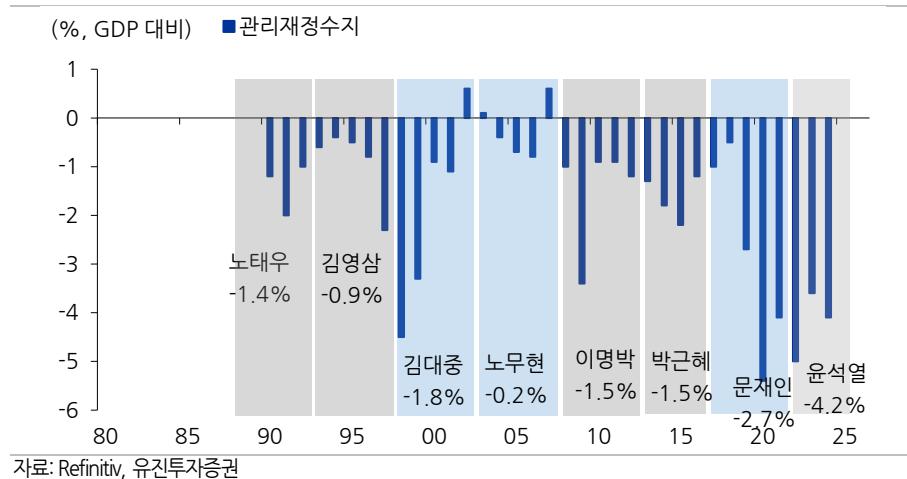


도표 2. 진보 성향 정부에서 반드시 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래도 대선 후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사례가 많지 않았고, 대형 이벤트로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경우도 있었다. 김대중 시기는 IMF 외환위기였고, 이명박 집권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선 후
주가는 상승 우위

그래도 대선 이후 KOSPI 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대선 한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에는 14~16% 상승했다. 대선 한달 후, 3개월 후, 12개월 후 KOSPI가 하락한 경우는 9번 가운데 3번에 불과하다. 숫자 상으로 대선 후 주가는 오른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 완화로
주가 변동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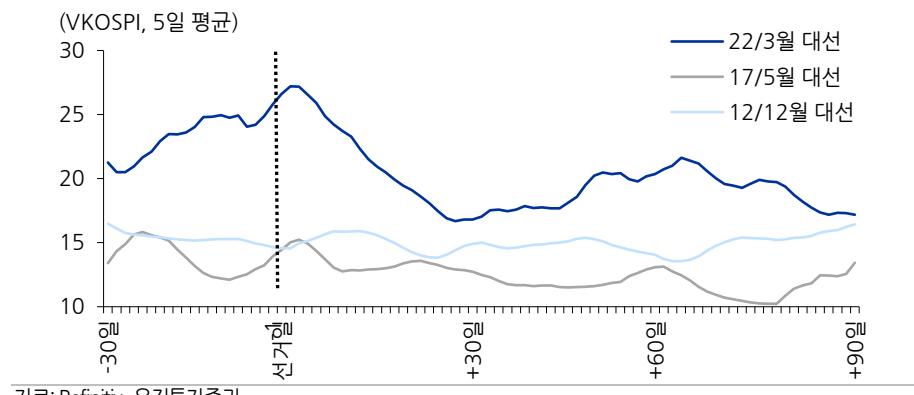
무엇보다 선거 전후 주가 변동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책 기대보다는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표 3. 대선 이후 국내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아

날짜	대통령	1개월 전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1981-02-25	전두환	-2.5	2.1	18.8	38.6	22.8
1987-12-16	노태우	3.4	24.1	32.4	53.9	92.4
1992-12-18	김영삼	6.3	4.9	0.9	14.9	32.3
1997-12-18	김대중	-15.4	16.6	23.8	-33.1	25.4
2002-12-19	노무현	5.6	-10.3	-23.6	-4.9	14.4
2007-12-19	이명박	-1.7	-6.8	-14.7	-5.4	-36.8
2012-12-19	박근혜	6.1	-0.3	-0.7	-5.5	-0.9
2017-05-09	문재인	6.6	3.1	4.6	11.6	6.6
2022-03-09	윤석열	-4.5	3.0	0.2	-8.3	-7.8
평균		0.4	4.1	4.6	6.9	16.5
중간값		3.4	3.0	0.9	-4.9	14.4
상승 확률		0.56	0.67	0.67	0.44	0.67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대체로 선거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하락



진보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

신 정부가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기대된다.

진보 성향 정부에서
부동산/주가 상승

첫 번째는 이전 정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와 그에 따른 증시의 상대적인 수혜 가능성이다. 국내에서는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섰을 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부동산과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보다
증시 정책이 강화될
전망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너무 올랐고 이는 큰 후유증을 낳았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그랬다. 이번 신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갖는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도표 5. 진보 성향 정부에서 부동산/주가가 더 상승

대선 날짜	대통령	주택 가격 (%)	서울 아파트 가격 (%)	KOSPI (%)	KOSDAQ (%)	기준금리 (bp)	관리 재정수지 (GDP %)
1987-12-16	노태우	48.6	77.0	34.6			-1.4
1992-12-18	김영삼	0.2	7.9	-40.4			-0.9
1997-12-18	김대중	16.3	56.2	85.7	-50.6	-810.0	-1.8
2002-12-19	노무현	24.0	52.9	160.5	39.2	75.0	-0.2
2007-12-19	이명박	13.9	-1.5	2.0	-32.3	-225.0	-1.5
2012-12-19	박근혜	8.5	9.5	11.7	26.0	-150.0	-1.5
2017-05-09	문재인	31.0	61.9	22.9	38.9	0.0	-2.7
2022-03-09	윤석열	-7.2	-5.1	-2.7	-18.1	150.0	-4.2
보수성향 정부 평균		12.8	17.5	1.0	-8.1	-75.0	-1.9
보수성향 정부 중간값		8.5	7.9	2.0	-18.1	-150.0	-1.5
진보성향 정부 평균		23.8	57.0	89.7	9.2	-245.0	-1.6
진보성향 정부 중간값		24.0	56.2	85.7	38.9	0.0	-1.8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도표 6.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심

구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
정책 기조	강력한 규제 투기 억제	강력한 규제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시장 개입 최소화
주요 정책	세금, 대출, 거래 규제 공급 확대 (2기 신도시)	세금, 대출, 거래 규제 임대차 2 법 정부 후반 공급 확대	세제 현상 유지
시장 개입	적극적	적극적	최소화

자료: 유진투자증권

대선 직후 내수 경기 개선 노력 기대

대선 이후 기대되는 두 번째 요인은 선거 이후 민생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선 이후
소비심리 개선 기대

국내 경제 특성 상 대선보다 대외 변수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 19 인플레를 제외하면 2012년과 2017년 대선 이후 소비심리는 개선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도표 7)

2 차 추경 가능성
주가와 금리
상승 요인

또한 재정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부는 1 차 추경(13.8 조원)에 이어, 20 조원에 달하는 2 차 추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장기금리를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나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 (도표 8)

도표 7. 2022년을 제외하면 대선 전후 소비심리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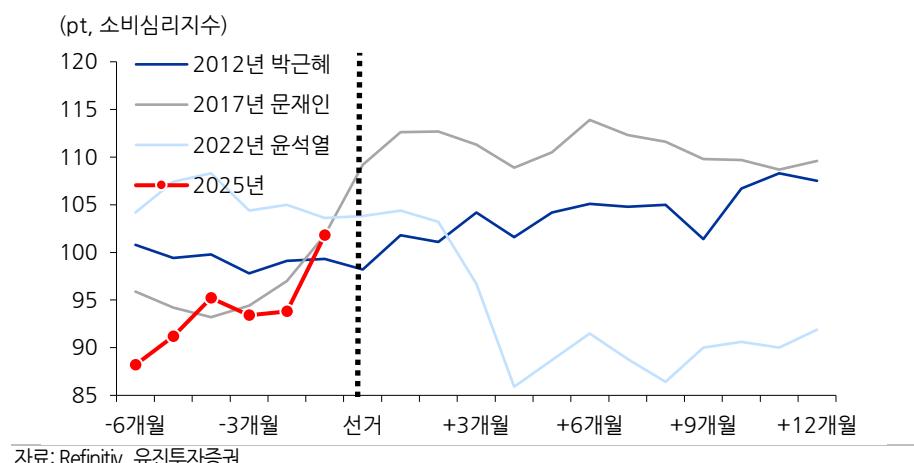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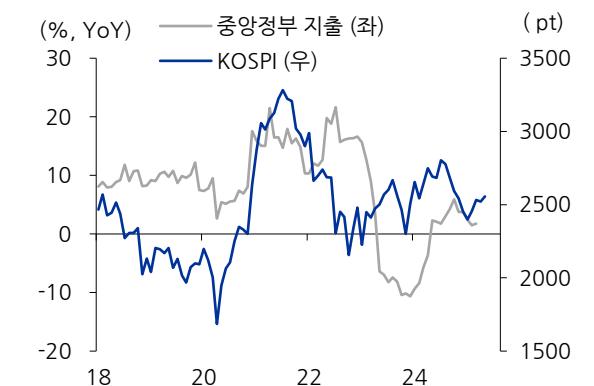


도표 8. 정부지출 증가, 장단기 금리 차 확대



도표 9. 정부지출 증가는 주가에도 긍정적



증권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대와 실제 효과는 다르다. 시차도 있다. 그래도 이전 정부와의 차이가 클 수록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 다음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주 보호 정책은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

우선, 증권업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이 정부 주도 하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도 주주 보호 정책은 증시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보다 증시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직전 정부와의 두드러진 차이는 에너지/기후 정책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직전 정부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 에너지 간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업종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도표 10.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주식시장 정책

구분	정책 내용
정책 기조	공정경제, 정부주도 산업정책, 공공투자 확대
대기업 정책	대기업 반칙·사익편취·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규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산업 육성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부 주도 육성, 공공펀드·클러스터 조성
세제 규제	핀셋형 세제 지원 (특정 산업, 기업 대상)
주식시장 정책 목표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식시장 관련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환원 강화 (배당 확대) ■ -상법 개정, 주주총회 의무, 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액주주 권리 보호 ■ -기업지배구조 개선(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AI/첨단산업	AI 인프라 대규모 확충, 민간투자 100조원, GPU 5만 장 확보,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 공공펀드 규제특례
에너지/기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녹색산업 국가전략화
노동/규제	노동존중,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등 노동자 보호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첨단산업·녹색산업 벨트, 공공주도 혁신클러스터

자료: 유진투자증권

유망 ETF 전략

대선 전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부양과 '주주환원' 강조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4월 21일 금융투자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어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i) 자사주 보유 한도 제한이나 ii) 자사주 소각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4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고배당,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관심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증권주, 배당성향 높은 배당주, 은행/보험 등 금융주와 관련 ETF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다. 주식시장 부양, 주주환원 강조 등은 국내증시 거래 증가와 함께 증권회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증권주 주가는 지난 4월 이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 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배당 수익률도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KOSPI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위 30 종목으로 구성하는 고배당주 지수에는 증권과 함께 은행, 보험 등 금융, 자동차, 통신 등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국내는 미국과 달리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유동성)이 (예금 등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올해 들어 2 번째 인하이고, 하반기에도 2 차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주는 금리보다 높은 수익(income)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 중 하나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

도표 11. 한국 국고채 3년 금리와 KOSPI 배당수익률



자료: Refinitive,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고배당주 지수 종목, 예상 배당수익률

코드	비중(%)	이름	업종	배당수익률 (예상, 2025년 연간, %)
A316140	5.6	우리금융지주	은행	7.1
A016360	5.3	삼성증권	증권	6.8
A024110	5.0	기업은행	은행	7.4
A086790	5.0	하나금융지주	은행	5.7
A000270	4.8	기아	자동차	7.3
A005940	4.7	NH 투자증권	증권	6.5
A000810	4.2	삼성화재	보험	5.6
A029780	4.1	삼성카드	은행	6.7
A017670	3.9	SK 텔레콤	통신서비스	6.8
A381970	3.9	케이카	자동차	8.6
A005830	3.9	DB 손해보험	보험	8.1
A004990	3.9	롯데지주	상사,자본재	6.4
A055550	3.5	신한지주	은행	4.5
A033780	3.4	KT&G	필수소비재	4.7
A138930	3.3	BNK금융지주	은행	6.6
A105560	3.3	KB금융	은행	4.0
A032640	3.1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	5.1
A078930	3.0	GS	에너지	7.0
A030000	2.9	제일기획	미디어,교육	6.9
A003690	2.5	코리안리	보험	5.7
A030200	2.4	KT	통신서비스	4.7
A003540	2.4	대신증권	증권	6.3
A267250	2.4	HD 현대	에너지	4.5
A139130	2.3	iM금융지주	은행	6.0
A000240	2.2	한국안컴퍼니	자동차	7.3
A004800	1.9	효성	상사,자본재	6.1
A175330	1.8	JB금융지주	은행	6.0
A036460	1.7	한국가스공사	유ти리티	5.2
A001430	1.3	세아베스틸지주	철강	6.7
A006360	1.3	GS건설	건설,건축관련	2.5

자료: Refinitive,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KODEX 증권 ETF: 주가, 배당수익률 추이



도표 14. KODEX 보험 ETF: 주가, 배당수익률 추이



주요 산업별 영향 점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 디지털·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은 기존의 실적 중심 접근에 더해 정책 방향성과 산업별 수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 정부의 정책은 특히 디지털 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자본시장 제도 개편, 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있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혜가 가장 큰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크립토/핀테크, 반도체, 화장품 산업 등이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선언과 그에 따른 전력망 투자 계획,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와 맞물려 정책 수요 양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중소형 장비 주 및 기자재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I 산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발표 이후, AI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관련 인프라 기업 등의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하드웨어 기반 기업들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핀테크 산업은 제도권 편입 논의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제도화 등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 및 블록체인 기반 기술주 전반에 걸쳐 긍정적 기대감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금융사와 협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플랫폼 업체 중심의 선별이 요구된다.

화장품 산업은 일견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K-콘텐츠 및 K-뷰티의 수출 확대, 내수 진작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경상화 기대가 맞물릴 것으로 보여 중소형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시금 시장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산업은 고정비 부담이 낮고 정책 효과가 빠르게 실적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중기 수익률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은 다소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신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연장을 포함하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국내 대표 업체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수혜와 글로벌 흐름을 모두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배당성향이 높은 증권주, 배당성향 높은 배당주, 은행/보험 등 금융주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다.

저평가 고성장주에 더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섹터와 주주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은 금융주들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AI, 디지털자산, 반도체, K-콘텐츠 관련 소비재, 금융섹터와 ESG 지수가 높은 기업들을 '전략적 비중 확대 섹터'로 구분한다.

반면, 전기전자, 유통, 운송, 건설 등은 정책 수혜가 제한적이거나 산업 자체의 경기 민감도 또는 실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중립적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추천한다.

통신서비스,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종 등은 오히려 정책의 규제 대상이 되거나 성장 모멘텀이 제한적인 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대기업 집단은 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규제, 공정위 감독 강화 등의 정책 영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도표 15. 신정부의 섹터별 영향 종합

구분	산업/부문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에너지, 유ти리티, ESG, 신재생, 화장품, 크립토, 대기업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화장품, AI, 크립토/핀테크, 신재생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분야	반도체, 유통, 의류, 엔터/미디어, 로봇, 제약/바이오, 조선, 에너지/유ти리티, 부동산, ESG, 은행/증권, 코스닥/벤처, ETF, 채권, 주식 시장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섹터별 영향

산업	주요 정책	예상 영향	차별화 정도 (1~5 점)	긍정적 영향 (1~5 점)	리스크 및 유의사항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 R&D 및 인력 지원 투자	▪ 소부장 업체 지원 확대	3	4	▪ 미중 간 무역 변수 잔존 ▪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한국의 경쟁력 약화 ▪ 근로시간 제한
	▪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	▪ 관련 인프라 수요 확대			▪ 정책 차별화는 크지 않음 ▪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전자	▪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목표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2	3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25%) 리스크 해결이 시급
	▪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 ▪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실증화 지원 ▪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 K-배터리 국산화 확대 ▪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			▪ 자동차, 부품 관세 합의가 타국가 대비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쟁력 좌우될 전망
2차전지	▪ R&D 강화 ▪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 소재/부품 국산화 확대 ▪ 세계 공제 기준 조정	3	3	▪ 국내 제도 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정책이 중요
	▪ 물가 안정 ▪ 농가 지원 (기후, 안심, 미래성장, 균형발전 정책)	▪ 내수 진작 ▪ 가격 인상 억제			▪ 곡물가 및 환율변수 ▪ 농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 ▪ 재원 확보 방안 및 시행 로드맵 부재
유통	▪ 내수 진작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K-브랜드 세계화 ▪ 온라인플랫폼법 개정	▪ 지역 화폐·소비 쿠폰 활성화 ▪ 관광객 유입 시 면세점·백화점 회복 기대 ▪ 플랫폼 규제로 온라인 수익성 하락	3	4	▪ 중국 의존도 및 외교 리스크 ▪ 플랫폼 규제 부담 ▪ 재정 지속성 한계, 특혜 시비
	▪ 내수 진작 ▪ K-뷰티 세계화 ▪ 중국 관광객 유치	▪ 중소·로컬 브랜드 성장 ▪ 오프라인 매출 회복 및 왕홍 마케팅 재개 기대			▪ 중국 규제 및 경쟁 심화 ▪ 마케팅 비용 증가 ▪ 플랫폼 의존도 리스크
의류	▪ 재정지원 통한 소비 활성화 ▪ K-패션 수출 확대 ▪ 플랫폼 수수료 투명화	▪ 중저가 브랜드 및 온라인 채널 확대 기대 ▪ 관광객 대상 역직구 증가 ▪ 중소 브랜드 온라인 노출 확대	3	4	▪ 소비 지속성 불확실성 ▪ 대형 브랜드의 플랫폼 협상력 약화 ▪ 패션 공급망 비용 부담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섹터별 영향 (계속)

산업	주요 정책	예상 영향	차별화 정도 (1~5 점)	긍정적 영향 (1~5 점)	리스크 및 유의사항
인터넷/SW	데이터센터 건설 및 GPU 확보	국내 AI 관련 투자 지속	3	3	온플랫폼 통과 해외 플랫폼 확장
	AI 클러스터 조성				
엔터/미디어	대규모 공연장 설립	공연 성장 및 해외 매출 확대	3	4	중국 개방 기대감
	한류 콘텐츠 지원 확대				
AI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 확대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 수혜 전망	4	5	재원 마련 불확실성 경쟁력 자체보다 공공성 강화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공공데이터 개방				
크립토/핀테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사 긍부정 요인 혼재	5	5	법제도 현실화까지의 시간 소요
	STO 사업 본격화				
	가상자산 ETF 도입, 기관투자 허용				
통신서비스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수익성 영향 제한적	2	2	규제 심화 경쟁 격화
	중저가 요금제 확대	AX 사업 수혜			
	AI 투자 확대				
통신장비	6G 상용화	상용화 시점인 2030년 전까지 투자는 제한적	2	3	최종 수요자 CAPEX 감소
	위성통신 기술 R&D 확대				
로봇산업	AI와 연계한 육성전략	로봇 및 AI 기술 육성	3	4	선도국 대비 투자 부족 정책적 차별 요인은 크지 않음
방위산업	수출 지원 강화	해외 수출 확대 기조 유지	3	3	수요국 보호주의 확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우주/항공	우주산업 R&D 확대	차세대발사체 및 위성 개발 확대	3	3	지역간 산업 클러스터 유치 갈등 민·관 기술 특허 갈등
	우주항공 부품 클러스터 조성				
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 기업들의 신약 투자 확대	4	4	R&D 성과로 직결 연동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됨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바이오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및 바이오	조성되는 금액이 유의미하게 크다면 기술 중심 지원 강화 기대	4	4	투자 분산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 할 수도 있음
	특화 펀드 구축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긍정적			
헬스케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 구축	보건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진행 의료 분야 AI 전문인력 양성	3	3	차별화된 공약 아님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8.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섹터별 영향(계속)

산업	주요 정책	예상 영향	차별화 정도 (1~5 점)	긍정적 영향 (1~5 점)	리스크 및 유의사항
조선	▪ 친환경 선박 및 해상풍력 연계 ▪ 선박 산업 육성	▪ 친환경 선박 등 중장기 성장 동력	3	4	▪ 중국 조선소 경쟁력 강화
운송	▪ 부울경 육성 전략	▪ 부울경 중심 해운업 육성 강화	3	3	▪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에너지/ 유ти리티	▪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 전력망 투자 증가	5	4	▪ 전기 요금 인상 명분 확대
정유/화학	▪ 저탄소 전환 ▪ R&D 지원 ▪ 배출권거래제 강화	▪ 국내 구조조정 확대 ▪ 고부가 스페셜티 전환	3	3	▪ 탄소 비용 증가
철강/금속	▪ 탈탄소화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일정 단축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인한 REC 거래로 원가 상승	4	2(단기) 4(장기)	▪ 탈탄소 준비와 재생에너지를 이미 확대해놓은 업체에 유리할 것
부동산	▪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 정비사업 활성화 ▪ 대형 건설사 수혜	4	4	▪ 양극화 심화 ▪ 인프라 과부하 우려
건설/ 건자재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GTX 노선 확대	▪ 국가균형발전 ▪ 지방 미분양 해소 기대	3	3	▪ SOC 예산 확대 필요
ESG	▪ ESG 관련 법규 신설	▪ 기업들의 ESG 준수 속도 빨라질 것	5	4	▪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중 우려 ▪ 기업 단체들의 로비
신재생	▪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대폭 확대	▪ 풍력, 태양광업체들 국내 매출 확대	5	5	▪ 실질 수혜는 중국업체들이 누릴 우려 ▪ 중국산 경제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과도한 보조금 등 포퓰리즘 리스크
은행	▪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 소외 계층 보호 ▪ 금리 인하 압력 ▪ 핀테크 등 사업모델 다각화	▪ NIM 감소 ▪ 중금리 대출 확대, 금융 포용 강화 ▪ 고질적 저평가 완화 가능성	3	4	▪ 각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민감 ▪ 규제 강화에 따른 경직 우려
증권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강화 ▪ 공모시장 제도 정비 및 IPO 활 성화 ▪ 핀테크 등 사업모델 다각화	▪ 리테일 투자 및, 중소형 IPO 확대 ▪ 핀테크 역량에 따른 차별화 ▪ 고질적 저평가 완화 가능성	4	4	▪ 금리, 환율 등 영향 큼 ▪ 규제 강화에 따른 경직 우려
보험	▪ 공적 건강보험 기능 강화 ▪ 민영 실손보험 규제 가능성 ▪ ESG 투자 권장	▪ 실손 보험 축소 가능성 ▪ 높은 배당수익률과 주주우선 정 책 강화로 저평가 해소 가능성	3	3	▪ 상품구조 규제 강화 ▪ 보험료 인상 제한 우려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섹터별 영향 (계속)

산업	주요 정책	예상 영향	차별화 정도 (1~5 점)	긍정적 영향 (1~5 점)	리스크 및 유의사항	
대기업	코스닥/벤처	■ 코스닥벤처 펀드 소득공제 25년말 종료 연장 ■ 경제력 집중 완화, 지배구조 개편 압박 ■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해소 강화 ■ 공정위 감시 강화, 상시 감독 체계 구축 ■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ESG·책임 경영 강조	■ 정부 주도 펀딩 활성화 후 IPO ■ 총수 중심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적 압박 증가 ■ 지주사 체제 전환 및 지분 정리 압박 ■ ESG 대응, 공정거래 강화, 중장기 신뢰도 개선 가능성 ■ 단기 경영 유연성 저하 우려	3 5	4 단기 2 장기 4	■ 기존 제도 대비 개선 정도 체크 ■ 시장 개입 강화로 인한 경영 자율성 저하 우려 ■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 ■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및 ESG 평판 향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될 가능성
	ETF	■ 상법 개정 추진 ■ 자사주 보유 한도 제한 ■ 자사주 소각 시 인센티브 부여	■ 주식시장 부양 ■ 주주환원 강조 등	4	4	■ 증권 거래 증가 ■ 증권주, 배당성향 높은 배당주, 은행/보험 등 금융 긍정적 영향
	채권	■ 경기 부양 위한 공격적 확장 재정 예상 ■ 국채 발행 확대: 7월 중 2차 추경 편성, 8월 말 26년 예산안 편성	■ 이재명 당선인 최소 35조원 추경 언급. 현실화 시 올해 25조원 이상 국채 추가 발행 가능 ■ 예산안 증가율 확대로 내년 월간 발행량 최소 17~18조원 상회하며 공급 부담 만성화	4	4	■ 국채 발행량 증가로 성장과 괴리 되는 금리 상승 리스크 ■ 중장기 인하 기조이나 공급 부담 역대 최고 수준. 장기금리 상승 압력 강함. 드레이션 축소 & 커브 스텝 추천
	주식시장	■ 주주 환원 강화(배당) ■ 상법 개정 등	■ 지배구조 개선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3	4	■ 기업 고유 경쟁력이 관건 ■ 중장기적 과제

자료: 유진투자증권

참고: 반도체 소부장

신정부에서 강조하는 반도체 정책은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AI 인프라 강화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R&D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자 지속성이 담보된 예산 확보와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확장될 수 있게 근거 법안을 마련할 전망이며, 주요 분야로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최근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주 4.5 일제와 주 52시간제 예외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카드인지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 국가들의 R&D 인력 중심의 강도높은 노동 시간을 따라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노조 등의 시 하루 12 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고, 중국도 996(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주 6 일 근무) 문화를 넘어선 007(24 시간 주 7 일 근무) 근무가 등장한 바 있다.

AI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궤를 같이 하는 NPU, PIM 등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100 조원 집중 투자와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AI 세계 3 대 강국 진입 노력은 국내 다양한 소부장 업체들로 하여금 국책 과제와 R&D 지원 등으로 AI 시장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20. 신정부의 반도체 및 AI 공약

구분	정책 내용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특별법안 통과 추진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 세액공제 10% 적용 추진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RE100 지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RE100 달성을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및 국비 조기 집행
R&D 및 인재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반도체 대학원 등 조속 추진
청년 과학 기술 인력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연구원 인건비 확대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국가과학기술혁신 위한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책 민간전문가 실질적 참여 산업계 및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자료: 유진투자증권

참고: AI, 플랫폼

반도체, 플랫폼, 데이터 산업 등이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주요 공약이었던 'AI 고속도로' 구축, GPU 5만 개 확보, 전국 단위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내 정책보다는 여전히 해외 및 빅테크들의 영향이 더 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플랫폼 기업도 수혜 대상으로 분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클라우드, AI 서비스, 데이터센터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과 AI 기반 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대규모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수요가 민간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확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산업 역시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다.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고도화 등의 공약은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전반에 걸친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는 AI 산업의 핵심 연료이자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신정부의 정책은 국가 주도의 AI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는 인프라, 플랫폼은 응용 주체, 데이터는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군 전체가 성장 기회를 맞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Crypto/Fintech

가상자산 분야는 제도화의 본격화와 함께 금융권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재명 당선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품 다양화를 넘어, 크립토 기반 파생거래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을 의미한다. ETF 허용은 기존 자산운용사들의 토큰 MMF(머니마켓펀드) 등 가상자산 기반 상품 출시를 가능케 하며, 운용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이끌 수 있다.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 확대는 거래소, 수탁, 청산 인프라 전반의 제도 정비와 산업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당선인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허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발행 주체로는 시중은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존 지급결제망을 보유한 은행들이 규제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의 결제·수탁·자금이체 기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편, 토큰증권(STO) 도입과 시장 확장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리지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의 탈중개화가 현실화되면, 중개·수수료 중심의 기존 수익모델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 STO 플랫폼 및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IT·핀테크 기업들은 크립토 인프라의 일부 영역—예컨대 거래소 시스템, 블록체인 보안, DID 등—에서 부가적인 수혜가 가능하지만, 정책 수혜의 중심축은 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금융 규제 안에서의 시장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업권을 중심으로 신사업 기회와 기존 구조의 재편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3.31 기준)